



농촌협약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2021. 11. 17(수)

오후 14시~17시

장 소

전북 임실군 청웅면 복지회관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주)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촌협약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2021. 11. 17(수)

오후 14시~17시

주 제

농식품부 농촌협약제도와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장 소

전북 임실군 청웅면 복지회관

*유튜브(농특위, 오르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참석자

농특위 위원, 농촌협약 관계자, 연구진 등 30명 내외

일정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개회식	(사회) 임정우 사무관
	인사말씀	김향자 농특위 분과위원장 심 민 임실군 군수
14:10~14:30	농특위 의결안건 및 행사취지 소개	구자인 농특위 분과위원
14:30~15:00	주제발표 : 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오테이 대표
15:00~15:10	휴식	
15:10~16:50	종합토론 - (좌장) 김정연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 김현숙 임실군 농촌협약 위원장 - 성주인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 정석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 한상엽 임실군 농촌활력과 팀장 - 황성수 임실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16:50~17:00	종합정리 및 마무리	

*시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현장토론회 안내		1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3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25
토론문		45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현 장 토 론 회 안 내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특위는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 의결(’ 19.12)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점검 중
- 대표적인 농어촌정책 사례를 선정하고 7대 세부과제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 및 향후 방향 제시

□ 현장 토론회 개요

- (목적)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으로 농어촌정책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어업회의소, 농촌협약, 어촌뉴딜300 등

-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주관) (주)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장소) 해당 정책사업의 선도적인 실천 지자체로 선정
- (대상)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30~40명 규모로 진행
 - 농특위 위원, 해당 정책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지자체 관계자 등
- (구성)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
 - 발제자 1인 : 해당 정책의 전문가, 농특위 농어촌분과 위원
 - 지정토론자 : 농특위 위원, 중앙부처 담당자, 지자체 행정 혹은 의원, 외부 전문가, 지역활동가, 언론사 등 구성

□ 현장 토론회 계획(안)

	일시	지역	정책사업	주 발제자 (소속, 농특위)
1	10.1 (금)	충남 청양	신활력플러스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現농특위 분과위원)
2	10.21 (목)	강원 평창	농어업회의소	김대현 사무국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3	11.17 (수)	전북 임실	농촌협약	김정연 위원 (농특위 분과위원) 오테이 대표 (로컬마스터)
4	11.18 (목)	전남 목포	어촌뉴딜	황길식 대표 (명소, 現농특위 분과위원)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구자인]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 농특위 의결안건(2019.12.03)의 배경과 주요 내용 -

[illegible]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동
협동조합

1. 농어촌정책의 근본과제와 해결방향

★ “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정비’ 인가?”

[문제의식] 농촌 현장 문제는 누구라도 쉽게 안다 !!! → “자기 애로사항과 핑계만 말한다”



주민 당사자
“제도 개선이 너무 안된다”

“상향식이라 말하지만 안된다는 것이 너무 많다”, “사전 준비가 너무 안된 상태에서 선정되는 것 같다”, “교육 방법은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지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행정 공무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사업지침이 너무 자주 바뀐다”, “주어진 업무량을 무시하고 신규 사업이 너무 많다”, “항상 감사가 두렵고 징계가 신경 쓰인다”, “행정 내부의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 “중간지원조직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컨설팅 기관
“고생하지만 보람이 없다”

“현재 입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결합이 어렵다”, “행정에서 항상 ‘을’ 취급받아 전문가로서 자존감이 떨어진 다”, “현장에 밀착하려 하지만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이라도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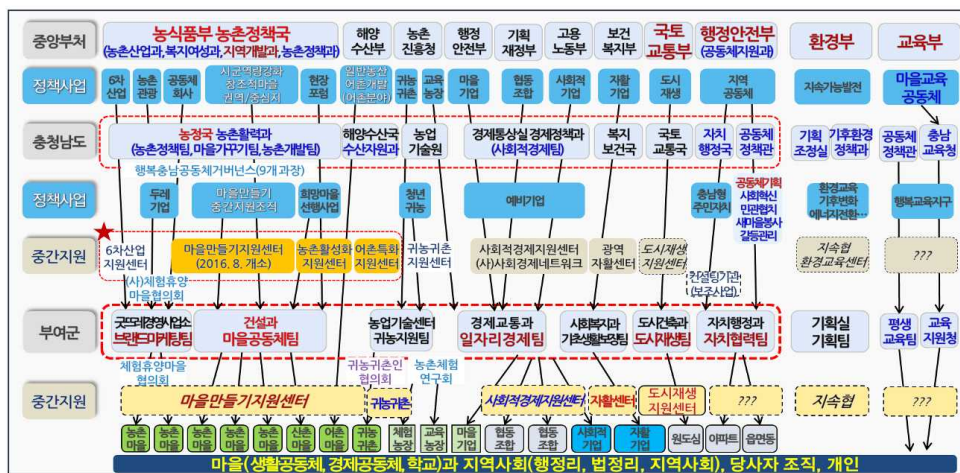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
“인력도 지위도 너무 열악하다”

“인력은 적는데 할 일은 너무 많다”, “같은 현장에서 시행되는 행정사업들 사이에도 칸막이가 너무 높다”, “주변에 역량 있는 활동가를 찾기 어렵다”, “행정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가 중요

5

[근본과제1] 칸막이 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행정도 민간도 ‘현장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신활력플러스, 푸드플랜, 농촌협약, 농어업회의소, 중심지활성화, 농촌공간계획
어촌뉴딜300, 도시재생뉴딜, 마을교육공동체 ... → 융복합 영역이 계속 확대중

→ 정책수요자 주민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총괄조정과 연계협력 강화

6

[근본과제2] 정책사업은 많지만 현장에★사람이 없다
→ 외부 컨설팅기관, 농어촌공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 정책사업으로 '사람과 조직' 중심의 정책 설계와 초기 단계 공공일자리 제공

[근본과제3] 민관협치도 주민자치도 많이 미흡하다
→ 단위 사업만 많고,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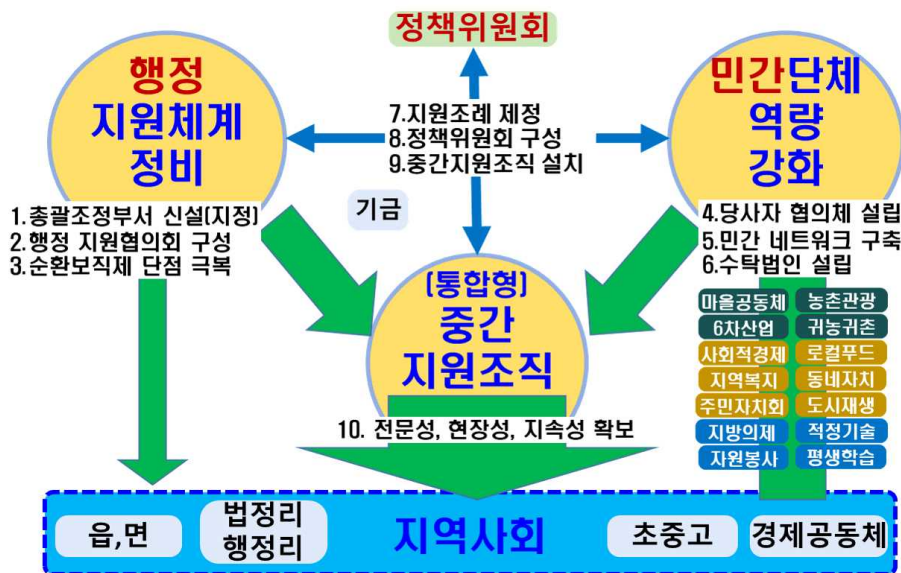
→ 시군 민관협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읍면/행정리 주민자치로 확장

[근본과제4] 주민생활권=면面에 대한 관점이 없다
→ 개별 사업들이 각각 시행되고, 협력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강력하게 결합하여 협업 성공사례 우선 도출

7

[기본방향] 지자체 '민관협치 시스템'★10대 핵심과제 해결
→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 모든 농어촌정책에 공통되는 민관협치 시스템 : 농촌지역재생의 핵심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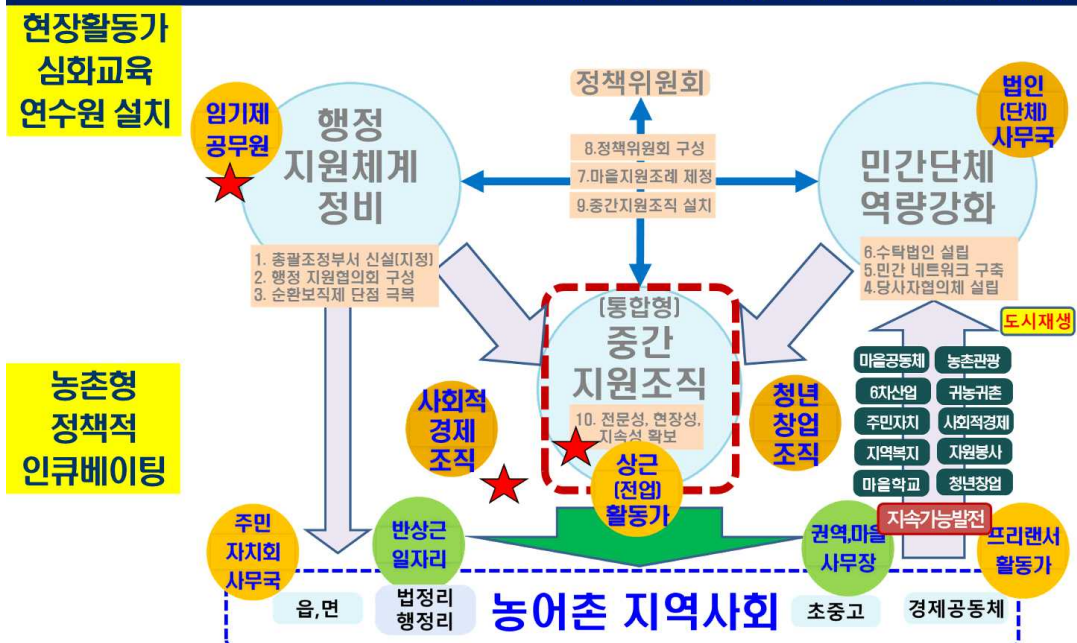
[기본방향2] 민관협치 시스템에서 주민/마을자치 시스템으로
 → 전체를 보면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현장 문제 해결



→ 하향식의 제도적 정비와 상향식의 민주주의 훈련 : 전체적 관점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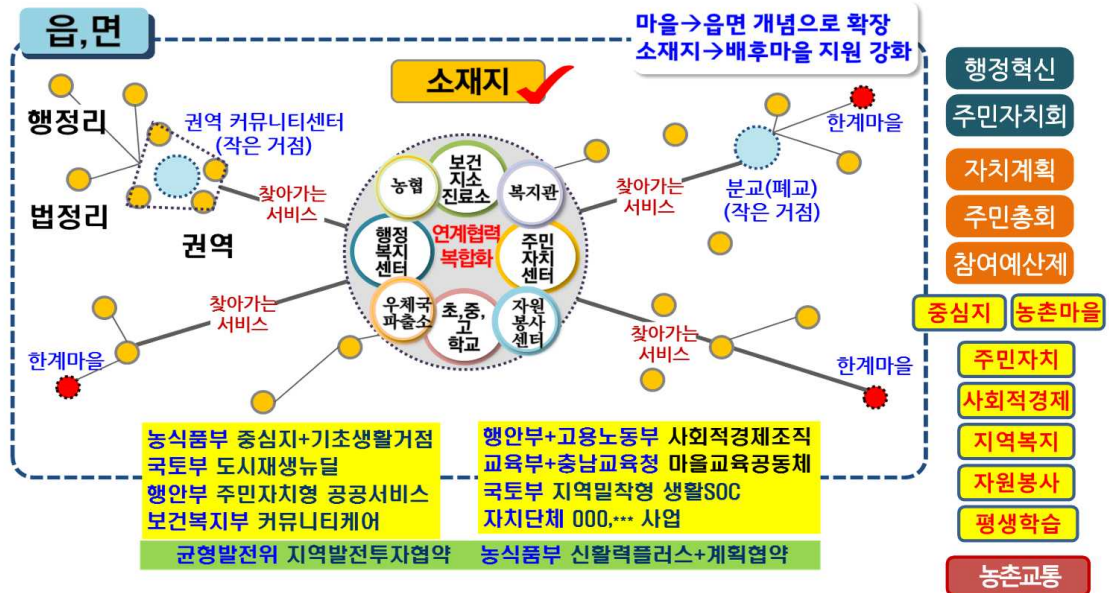
[기본방향3] 정책사업 매개로 공공일자리 우선 창출
 → 농어촌 지역 기반의 다양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 “할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는” 근본적 한계에 전략적 접근

10

[기본방향4] 읍면 단위 정책 협업과 주민주도성 강화 → 농어촌 읍면 단위, 주민 주도의 발전계획 수립



→ 읍면 사무소 행정혁신과 주민자치회 전환의 결합으로 성공사례 도출 11

2. 농특위 의결안건 소개(2019.12.03) “취지와 주요 내용, 핵심 점검 항목”

[충남 경험] 농촌마을 문제 해결+정부 정책에 선제적 대응
★ → 광역 단위에서 기초 시군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지원



→ '광역은 광역답게', '행정은 행정답게'에 '사람과 조직' 정비에 우선 집중



[충남 광역] 끊임없는 공동학습 + 다양한★선행경험 축적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경험의 평가와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

계간지 **마을독본** 발간
(2017~21, 총15회)

월간 뉴스레터 발송
(총42회)

시군순회 **대화마당** 개최
(2016~21.9, 총52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홍성	광역	광역	광역	광역	광역-종합
2	아산	홍성	청양	예산	아산	당진-협의회
3	논산	금산	3농대학(청양)	천안	태안	아산-법인
4	예산	천안	예산	서천	당진	금산-행정
5	보령	보령	홍성	청양	광역	청양-중간
6	천안	서천	아산	금산	보령	광역-우수사례
7	청양	예산	당진	논산	광역(홍성)	
8	서천	아산	서천	광역	광역	
9	태안	공주	태안			
10	광역	광역	광역			

14개 시군 정책시스템 구축
연구용역(2년 연속)

15개 시군 **순회 방문** 컨설팅
(연간 2회)

광역 및 시군 센터 **직무연수**
(2박3일, 연간 2회)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월1회 정기회의)

충남 광역 농촌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작은 국제학술행사

정책연구회, 정책워크숍

→ 충남에 축적된 다양한 경험의 전국적 평가와 확산 : 농특위 의결과제

17

[농특위]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 농어촌분과 제출, 3차 본위원회 의결, 2019.12.3, 의안번호 2019-5호

【2대 기본방향】

1. 단위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로 개편
2.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주체 중심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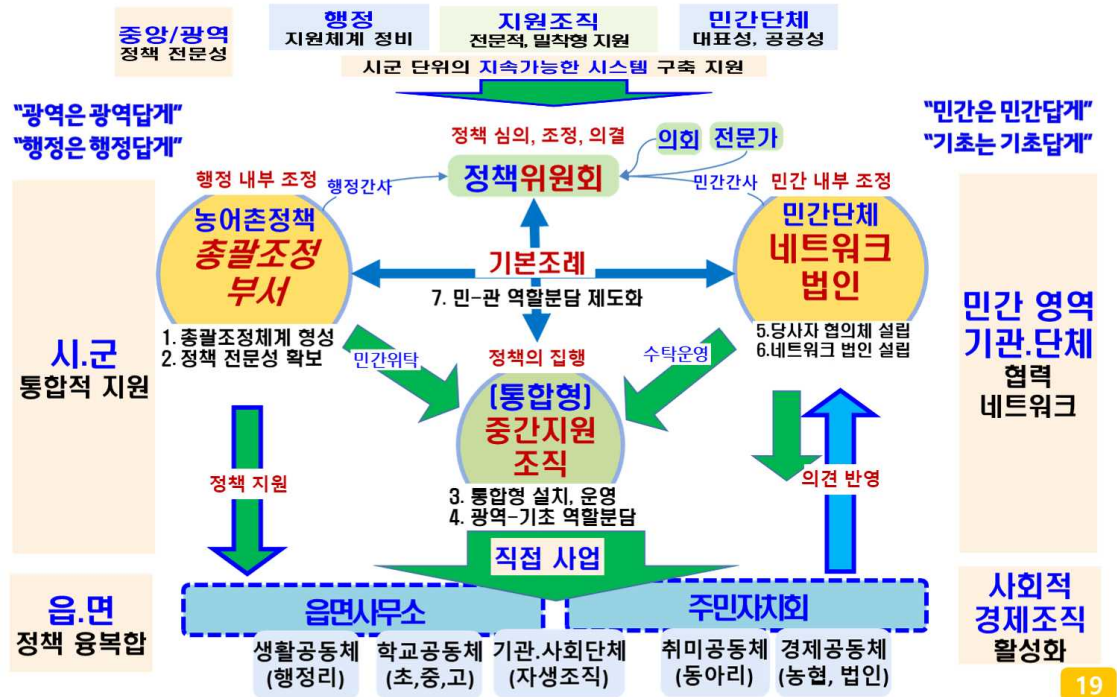
【4대 주요 의제(Agenda)와 7대 세부과제】

4대 주요 의제		7대 세부과제
행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형성 2. 전문가 채용, 담당 공무원의 농어촌 정책 전문성 확보
행정- 민간	민관협치 강화	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연계협력 강화
민간	민간의조직화촉진과 자치역량 강화	5. 이해당사자 협의체 조직·육성 6. 민간 협력 네트워크 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제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18

[농특위] 지자체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와 7대 세부과제

→ 자치분권 시대에 모든 농어촌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스템



[14대 점검항목] "7대 세부과제"의 주요 정책별 세부 점검

1) 신활력(청양), 2) 농어업회의소(평창), 3) 농촌협약(임실), 4) 어촌뉴딜(목포)

4대 주요 의제		7대 세부과제	★ 14대 점검항목
행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형성 2. 민간전문가채용, 공무원의 농어촌정책 전문성 확보	1-1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1-1 관련부서간 행정협의회 운영 정례화, 업무소통 정책 협력 추진 2-1 필수보직기간 준수, 전문/공모직위제 확대 등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2-2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민관협치 강화	3. 농어촌정책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4. 광역·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분담·연계협력 강화	3-1(중앙) '삶의질법 등'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 의 법적 지위 확보 3-2(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 유도 4-1(광역)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기초지자체 지원 기능 강화 4-2(지자체) 통합의 범위와 형태, 시기 등은 지자체 자율성 부여
민간	민간의조직화 촉진과 지역활성화	5. 민간의 이해당사자 협의체 조직·육성 6.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비영리법인 육성	5-1 민간 자발성을 토대로 한 당사자 협의체 설립 지원 5-2 현장 학습모임 등 단체 필요에 따른 조직화 활동 적극 지원 6-1 민간 주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 장려 6-2 사무위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사업 등으로 민간법인 의 성장 촉진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7.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 제도화	7-1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책의 기본조례 ' 제정 7-2 기본계획, 정책위원회/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민관협치 제도화

20

[농촌협약_전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기존의 지역 성과를 반영하며 구조적 과제에 근본적으로 접근

- 2021.11.12 현재, "농촌협약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 진행중

1) 기존에 설치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확장하며 통합성 강화

- 행정의 담당부서도 동일하고, 민간 당사자도 모두 동일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은 제도적으로 동일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

2) 읍면 주민자치회와 강력하게 연계. 주민생활권 단위의 집행조직 구축

-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규모나 역할 측면에서 제도적 기능에 더욱 충실
- 농촌정책 측면에서 읍면 단위 주민자치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농식품부, 해수부)
- 농촌협약지원센터의 현장지원센터 기능 +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협력관계 강화

3) 사업기획 과정부터 이해관계자 사이의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 중시

- 용역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책임성 강화
- 농촌협약지원센터 상근자의 조기 채용과 상호학습과정 병행
 - * 인건비 '조금' 아끼려다 '큰 사업' 망칠 수 있는 우려 예방
- 공동학습회 방식의 '포럼' 병행 : 사무국을 지원센터가 담당(시군역량강화사업)

21

[농촌협약_방향]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강화의 지렛대 역할 →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시스템 재정비

3대 방향, 9대 세부과제(제안)

[방향1] 자치분권 추세에 선제적으로 '행정 지원체계 정비'

- 1) 농촌정책 체계화와 총괄조정 권한 강화 : 농촌(공동체)정책'과' 신설
- 2)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 3) 행정 공무원의 정책전문성 강화 :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방향2] 민관협치 관점에서 '추진체계 제도화'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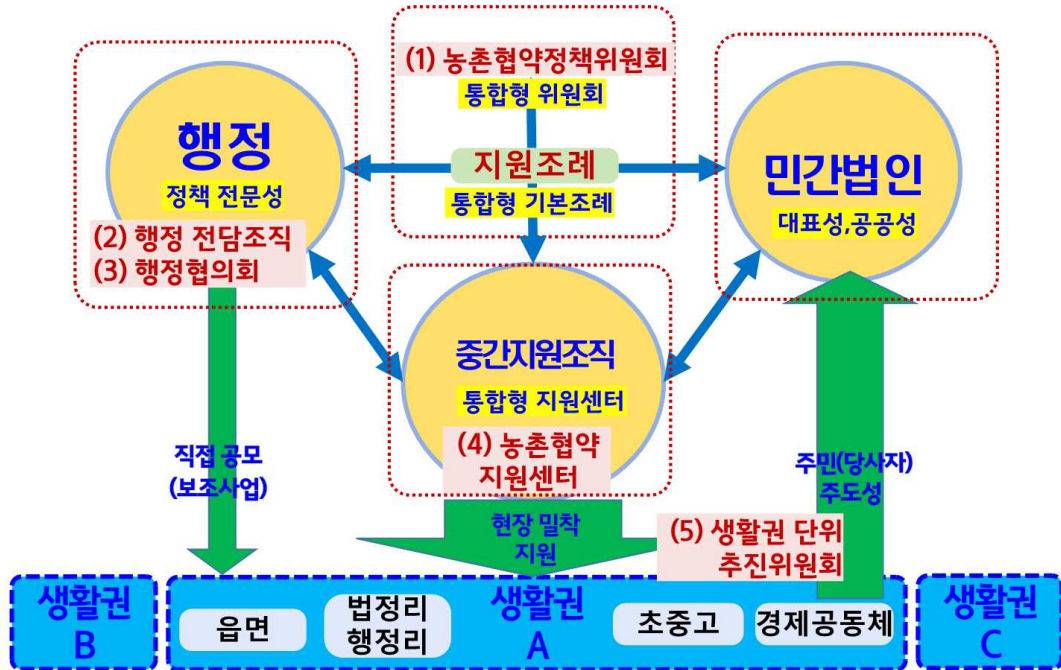
- 1) "(가칭)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농촌협약 실행 기본조례" 제정
- 2) 농촌정책(농촌협약)위원회 설치 : 민관협치의 의사결정 기구
- 3) 확장된 통합형 농촌정책(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 : 민관협치의 정책 집행기구

[방향3] 현장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 1) 당사자협의체와 네트워크 법인 활성화 : 민간 주도 + 정책적 인큐베이팅
- 2)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정 결합과 활성화 : 생활권 단위 민-관, 민-민 협업 강화
- 3) 행정리 마을자치회 전환 : 마을민주주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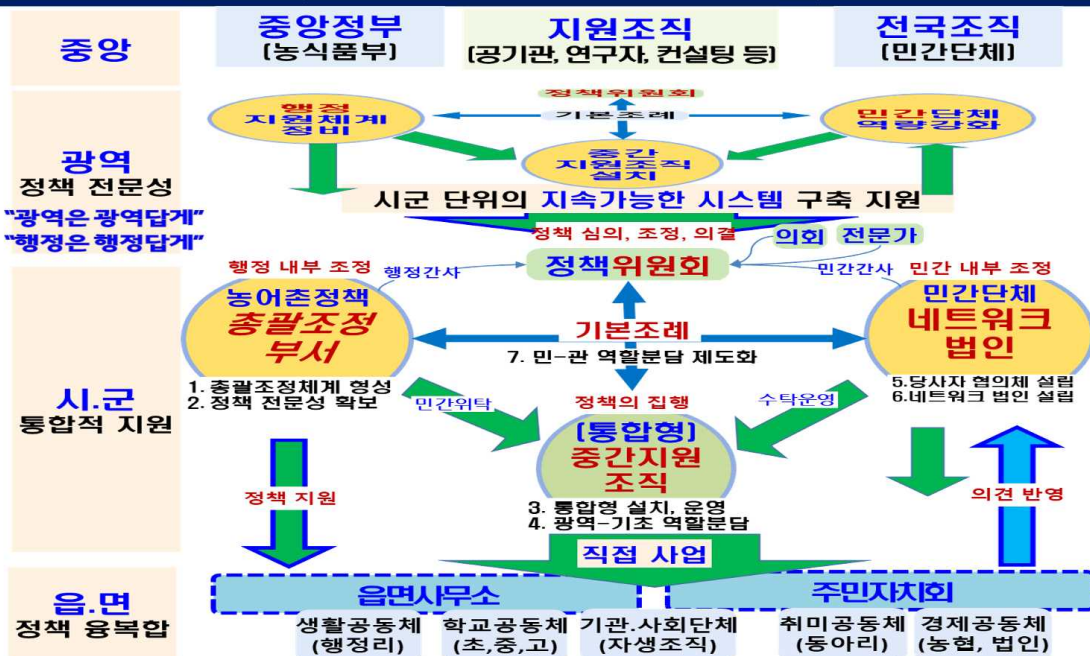
22

[농촌협약_추진체계]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과 강화
 → 농촌정책의 체계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23

[목표] 자치분권 시대,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정책혁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



→ 현장밀착형, 문제해결형 지자체 농어촌정책 추진(지원)체계 구축

24

[참고]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안)의 추진체계
 ★ “14대 점검항목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25

[정책위원회] 민관협치형 농촌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끔 농촌정책의 '공동결정'과 책임성 강화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개념] 농촌협약 정책위원회 ↔ (현행) 농촌협약협의회

- 1) 제도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민관협치 관점에서 행정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군 단체장(또는 **부단체장**), 전담 및 관계 부서의 장, **지방의원**, 중간지원조직 대표, 민간 전문가, 주민 당사자협의체 대표 등 행정과 민간의 대표자로 구성

- 1) 시·군별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과 민간의 **공동위원장** 방식 권장
- 2) **위원회 간사**는 행정의 전담부서 장과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이 공동으로 담당하면서 행정과 민간의 의견수렴과 안건 협의, 결과 공유 등 수행 : **담당과장+센터장, 혹은 담당 팀장+사무국장**
- 3) 자문위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수 포함하여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 형태로 자문위원단 설치** 가능 : **분과위원회 = 마을공동체위원회, 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 대체 가능

26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역할] 농촌협약 중요사항의 협의, 결정 ↔ 자문, 협의

제도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의 진단, 미래 방향 설정, 생활권 설정, 사업 선정 등 농촌협약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함

-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2)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확정,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결정, 다음 연도의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의 협의 및 결정
- 3)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각 개별사업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결정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 1)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특히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용역사 선정 등 실무 준비 차원에서 수시 개최
- 2) 참여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 제공
- 3) 행정 및 민간 간사는 수시로 업무를 협의하고, 회의 결과는 최대한 관계자들에게 공유
- 4)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에는 생활권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분과나 협의회, 포럼 형태의 조직 배치도 가능
- 5)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시·군 여건에 맞게 운영

27

[행정 전담조직] 농촌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의 행정 책임성 강화 →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끔 지자체 농촌정책의 고유성 확보와 체계화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개념] 농촌협약의 행정 내 총괄조정 부서

[구성] '과' 단위 부서로 일반직+임기제 공무원+공무직원으로 구성

- 1) 다만,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의 경우에도 농촌지역개발 관련 민간 전문가 또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농촌협약 업무 담당 시에는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인정
- 2) 전담부서(주무 팀)는 농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자로 구성
- 3) '과' 산하의 '팀(계)'은 농촌협약의 직접 사업과 농촌정책(농촌계획, 농촌개발, 농촌산업, 농촌사회복지, 푸드플랜, 귀농귀촌 등) 및 공동체정책(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평생학습, 마을교육공동체, 상권활성화, 청년 등) 영역의 업무로 배치

28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조건] 아래 3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전담부서로 인정

- 1) 지자체 조례에 전담부서(혹은 총괄조정부서)의 설치 및 운영 명시
- 2) 주무 '팀(계)' 산하에 농촌협약과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적절한 전담인력*을 배치
* 최소 인원은 몇 명이 적절한가
- 3) 농촌협약 업무 담당자가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여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직위제 혹은 전문직위제 도입, 민간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문서로 증명**

[역할과 운영] 농촌협약의 전 과정을 담당

- 1)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민간에 대한 창구** 역할을 담당
- 2) **행정협의회의 간사** 역할로 관련 업무 사이의 조정과 소통, 협조 등 담당
- 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9

[행정 협의회] 농촌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정책 협업 강화 → 관·관 협력을 통해 생활권 현장 주민의 정책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개념]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 주체들의 **협의** 기구

[구성] '전담부서'와 연계협력 부서 '팀장' 으로 구성

- 1) 단체장(또는 **부단체장**)이 협의회의 장을 담당하고, 농촌협약 추진 **전담부서(과장)**와 활성화계획 포함 사업 및 **연계사업 팀장(계장)**으로 구성
- 2)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을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행정협의회의에 반드시 포함
- 3)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이라면 해당 사업의 행정협의회의와 병행하여(또는 확대 개편하여) 운영 가능

30

[역할과 운영] 농촌협약 활성화계획 세부 사업의 협의, 연계, 조정 등

- 1)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
- 2)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 업무협회는 수시로 진행
- 3) 1/4분기 정기회의의 기본 안건은 해당 연도의 전체 사업계획 협의, 연중 일정계획 조율, 민간보조사업 선정절차 협의 등
- 4) 4/4분기 정기회의의 기본 안건은 해당 연도의 추진성과 및 애로사항, 해결방향 협의, 다음 연도의 사업예산계획 협의 등
- 5)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핵심내용은 정책위원회와 공유

31

[농촌협약지원센터] 민관협치 관점의 중간지원조직 → 농촌정책의 현장밀착형 '공동집행'을 위한 전문조직

[개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간지원조직(시군 단위)

[구성] 현장밀착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채용

- 1) 시군 내에 농식품부 소관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통합하여 운영
- 2) 타 부처 소관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 3) 1개의 조직이 모두 농촌협약을 담당할 필요는 없고,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분담하여 담당 가능

32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역할] 농촌협약의 행정과 민간 사이 가교 역할 수행

-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 **총괄 역할**
-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군 역량강화사업 수행**
-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역할 반영. 농식품부 이양사무 수행**
- 4) 농촌 읍·면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 **농촌개발 하드웨어 사업 참여 여지**
- 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 **주민자치회 연계 역할**
-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사회적경제 연계 역할**
- 7) 농촌 주민 삶의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 **농촌복지 전반의 역할**
-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 **소규모 자료실, 연구실 기능**
-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내 민간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33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운영] 민관협치 관점에서 설치, 운영

- 1) 지자체장은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또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2) 다른 중간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선택 가능
- 3)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개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에 가능하면, 생활권 **읍·면 단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 농촌협약지원센터와 업무협조체계 구축
- 4) **지방비 매칭 예산의 7.5%**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사용할 수 있고, **4명 이상 배치**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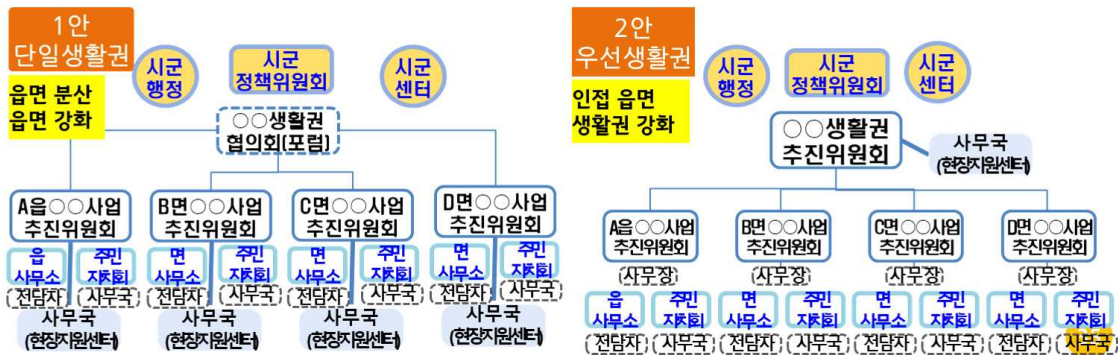
34

[쟁점] 농촌협약-생활권 구분과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권장) → 농촌정책의 현장밀착형 '공동집행'을 위한 전문조직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개념] 생활권 단위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

- 1안) 단일생활권(중위 서비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 활성화계획 상의 농촌중심지, 기초 생활거점사업을 포함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생활권 대상으로 운영. 이 경우에는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위원회 산하에 **읍면별 분과**를 두고 운영
 - 2안) 우선생활권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시군 내 여러 생활권에 걸쳐 우선적이고 긴급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읍면별로 사업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추진위원회도 읍면별로 운영
- * 어느 경우나 추진위원회 결정 안건은 시군 단위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농촌협약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지자체 의견수렴용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 + 행정(읍면장) +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등

- 1)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존중하되, 권역별·계층별·분야별로 고루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
- 2)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읍면장과 주민자치회장의 **공동위원장** 체계 권장. 위의 ①의 경우에는 갈등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

[역할] 농촌협약의 생활권 단위 사업의 조정과 결정

주민 의견 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 지역사회와 공론장 개최,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세부 내역사업의 협의와 결정 등

- 1)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 2)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3) 일반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감대와 참여 유도
- 4) 사업계획 수립·시행과정에서 추진과제의 설정, 사업대상지 내용 물량의 결정 변경 등 중요 사항의 협의·결정·조정

[쟁점(제안1)] 중앙과지방 사이의 거버넌스

→ 농촌협약의 취지에 맞게끔 상호간의 정책 협약 방식 도입

<구자인 제안 사항>

[기본] 중앙-광역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중앙) 전략·활성화계획 검토·조정·승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평가 등을 담당

- **정책위원회(의사결정기구)**: 농식품부 내에 협약 대상사업 담당부서장(과장)과 공공기관 연구자, 민간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현장 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 → 현장 의견수렴과 조정, 세부 지침 변경,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농촌협약지원단**: 공공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지정 → 시·군 선정 과정과 각종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협약 평가, 조사와 분석/연구 등
- **중앙계획지원단(중계단)**: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권역별로 운영

(광역) 시·군의 계획서 사전 검토·자문,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이행 지원 등 담당

- **정책위원회(의사결정기구)**: 시·도 단위 민관합치 기구. 농촌정책 전반의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시·도 행정**: 시·군의 협약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점검결과는 협약 평가 시 활용)
- **농촌협약지원센터**: 기존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설치 → 시·군 계획을 사전 검토·자문, 계획내용 조정 등 지원 역할 수행

* 농촌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시·군의 활성화계획 이행에 시·도비를 투입하고, 행정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 시·도별 인센티브 제공

37

<구자인 제안 사항>

	중앙	광역	기초
정책위원회	<농촌협약 정책위원회> · (구성) 행정, 전문가, 민간 당사자 등 (중계단 포함)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최종 승인, 협약서 승인,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결정 등	<농촌협약 정책위원회> · (구성) 행정, 전문가, 민간 당사자 등 (광계단 포함)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승인, 협약서 검토,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결정 등	<농촌협약 정책위원회> · (구성) 행정, 전문가, 민간 당사자 등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승인, 협약서 검토, 농촌협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결정 등
전담조직	<전담조직> · (구성) 지역개발과(농촌정책국)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검토, 사업 부서 간 의견 검토	<전담조직> · (구성) 총괄·조정 부서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검토, 사업 부서 간 의견 조정, 협약 주체로 참여해 예산 투입, 협약 이행 등	<전담조직> · (구성) 총괄·조정 '과'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검토, 사업 부서 간 의견 조정, 협약 기획·이행 등 전담
행정협의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필요시)> · (구성) 지역개발과(농촌정책국) 및 연계 사업 담당부서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협의, 사업 부서 간 의견 조정	<농촌협약 행정협의회(필요시)> · (구성) 농촌지역개발 전담조직과 연계 사업 담당 부서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협의, 사업 부서 간 의견 조정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 (구성) 전담조직과 활성화계획 연계 사업 담당 팀(계) · (역할) 전략계획·활성화계획 협의, 사업 부서 간 의견 조정
지원기구	<농촌협약 지원단> · (구성) 공공기관 설치,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 (역할) 계획수립과 지자체 선정 과정 지원,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각종 기준 개발, 이행 지원	<광역 농촌협약 지원센터> · (구성)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활용하여 운영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검토·자문, 시·군간 조정 등 지원	<기초 농촌협약 지원센터> · (구성) 기초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활용하여 운영 · (역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이행 지역 역량 강화 생활권간 조정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등 지원

* 농식품부(농촌협약추진단)는 기본조례 표준안, 업무 추진 매뉴얼, 우수사례 자료집, 논문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생산을 위해 노력

38

발제문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김정연 위원 (농특위 분과위원)

오태이 대표 (로컬마스터)

2021. 11.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김정연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오테이 대표 (주식회사 로컬마스터)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1. 농촌협약 제도의 이해

- 01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배경
-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2. 임실군 농촌협약 계획수립

- 01 개요 및 추진경위
- 02 농촌공간 전략계획
- 0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3. 임실군 농촌협약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과제

- 01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성 (임실군)
- 02 행정의 역할과 과제
-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 0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1. 농촌협약 제도의 이해

- 01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배경
-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1. 농촌협약 제도의 이해

02

01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배경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변화

종합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농촌협약제도 도입

➡ 농촌공간 주요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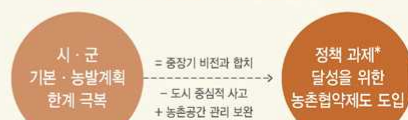
➡ 개발사업 정책변화



➡ 농촌협약제도 도입배경

- 01 자치분권 강화, 배후마을 정책기능 지방이양
새로운 개념의 농촌 정책 거버넌스 요구
- 02 농촌 공간의 개별 단위사업의 투자 반복
점적인 사업→농촌 난개발 지속, 연계성 부족
- 03 저출산, 고령화, 서비스 인프라 부족, 인구유출 등
저하되는 정주환경에 대한 대안 필요

통합적 관점의 지역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제도 도입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경제 활력 제고 / 지역 공동체 활성화

01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배경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계획 수립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농촌 중심지와 마을간 기능적 협업을 통해 촘촘한 서비스 공급망 구축

농촌 어디서에서나 일상생활에 불편 없도록 중심지-기초생활거점-마을을 연결하는 사람중심의 365생활권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생활권 단위의 활성화 방안 구축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단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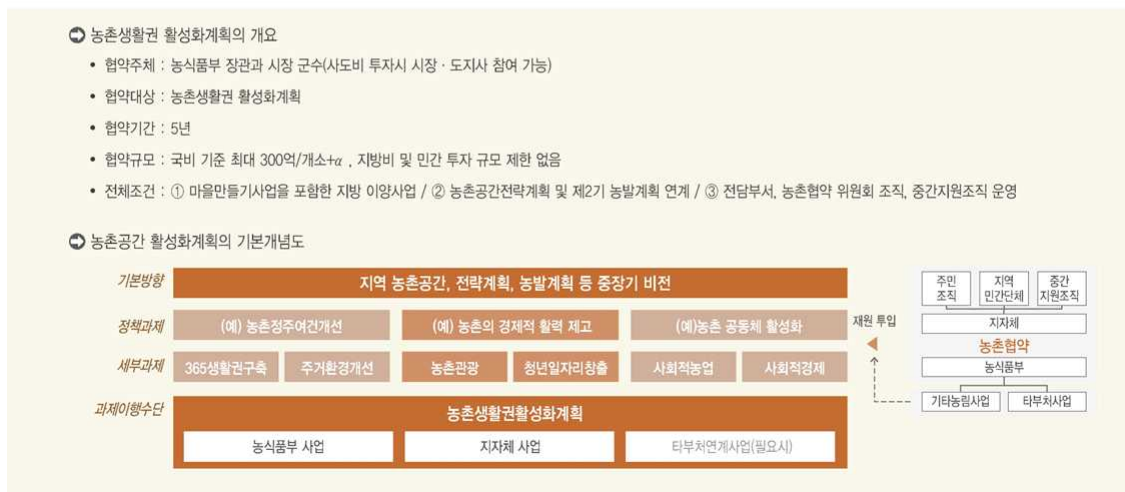
농촌협약제도의 주요 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적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공간 계획 수립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원방식 전환

협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지원방식 전환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대응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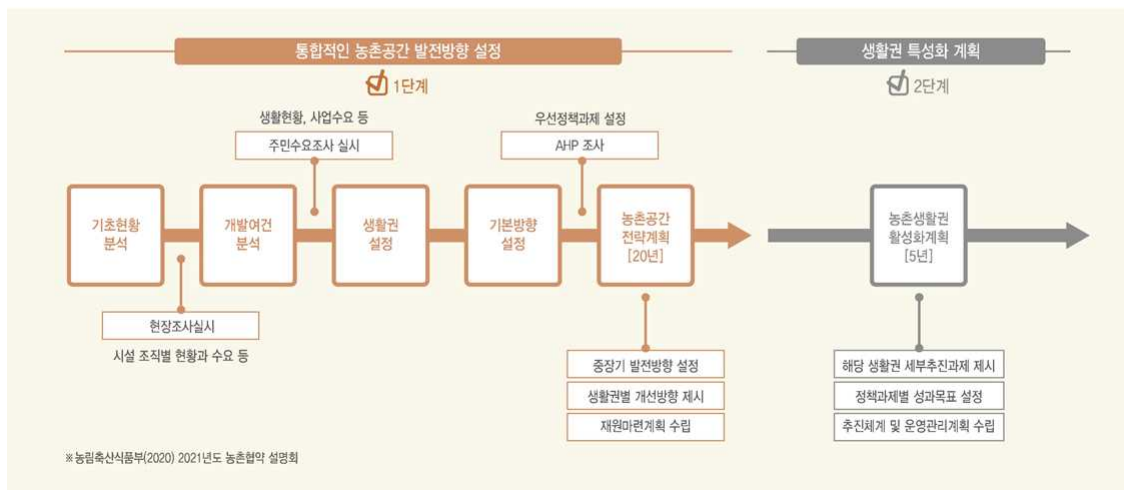
■ 농촌공간 전략계획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농촌공간 정비계획 비교

구분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
시간적 범위	• 20년	• 5년	• 5년
공간적 범위	• 시·군	• 시·군 내 생활권	• 시·군 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특정지구
기본 개념	• 시·군의 장기 발전계획	•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	• 농촌주거환경, 경관정비 및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추진계획
주요 내용	• 시·군 전체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 해당 생활권의 개선·활성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예정 사업목록, 예산·자원, 일정 등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 토지이용, 주택, 공동시설, 유해시설 등 주요 시설 입지 현황 파악 – 정비대상지, 이전예정지 현황 파악 •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 마을 환경 정비 및 경관 관리계획
사업 예시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사업 미포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마을만들기사업(이양사업)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 농촌형교통모델 •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 농촌재생뉴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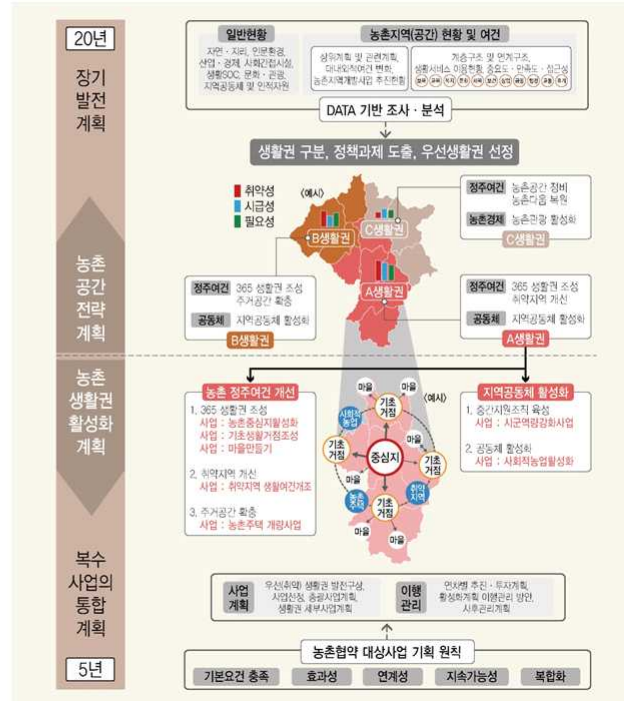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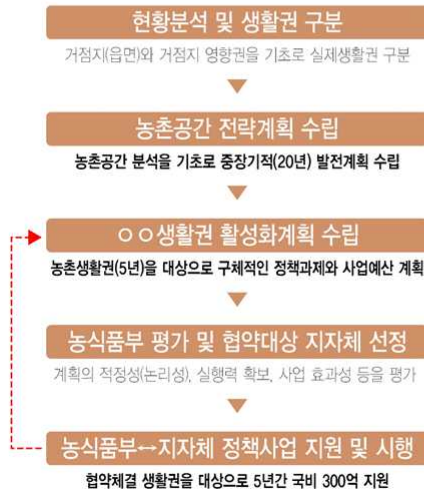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종합적인 농촌공간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지역발전계획 수립

통합적인 농촌공간 발전방향 설정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 농촌공간계획 유형별 내용 구성

농촌공간 전략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일반현황 및 여건	제3장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제4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5장 농촌공간 발전계획	제6장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1.배경 및 목적 2.계획의 범위 3.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4.계획수립 경위 및 방법	1.자연 지리 / 2.인문환경 3.산업 경제 / 4.사회간접시설 5.생활SOC / 6.문화 관광 7.지역공동체 및 인적자원	1.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대내외적 여건 변화 3.농촌공간구조 및 서비스 공급·이용	1.비전 및 목표 2.농촌공간 구상 3.추진과제 4.주요 지표 설정	1.농촌생활권별 발전구상 2.농촌생활권 활성화방안 3.농촌공간 정비방안	1.재정현황 2.자원조달 계획 3.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4.관리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생활권 현황 및 여건	제3장 ○○생활권 기본구상	제4장 ○○생활권 총괄 사업계획	제5장 ○○생활권 세부 사업계획	제6장 집행 및 관리계획
	1.배경 및 목적 2.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3.계획수립 경위 및 방법	1.일반현황 및 여건 2.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3.종합 분석	1.비전 및 목표 2.활성화 전략 3.추진과제 4.사업 선정	1.총합사업계획도 2.사업 총괄표	1.농촌 정주여건개선 2.농촌경제 활력 제고 3.지역 공동체 활성화	1.이행 및 집행계획 2.이행관리 계획 3.사후관리 계획
농촌공간 정비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1.배경 및 목적 2.계획의 범위	1.정비 대상지(정비지구) 현황 -상위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토지이용 현황, 유휴시설 현황, 정비지구 종합분석도 2.이전 예정지(이전지구) 현황 -상위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토지이용 현황, 유휴시설 현황, 이전지구 종합분석도 3.사업 대상 시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정비 방향 및 목표 2.기본구상 -토지이용 구상, 기본구상도(토지이용계획도) 3.공간계획 -정비지구 공간계획, 이전지구 공간계획, 마을 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4.사업 추진계획 5.투자계획		

02 농촌협약 정책목적과 추진방향

■ 농촌협약 정책과제 및 사업 예시

정책과제(안)	세부과제(안)	과제 이행 수단(사업) 예시	
		농림부 (※ 농촌협약 대상사업)	타부처 (※ 농촌협약 연계사업)
1. 농촌 정주 여건 개선	① 365 생활권 조성	- 농촌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기초조성 - 마을민들기(지자체) (필수) 농촌협약 전제조건 - 농촌형 교통모델 - 농촌보육아간개선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문화부)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문화부)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문화부) - 공공립 어린이집 확충(복지부) - 다문화 돌봄사업(복지부)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복지부) -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여가부) - 전통시장 주자환경 개선사업(중기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교육부)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너지공단)
	② 취락지역개선	-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환경부)
	③ 주거공간 확충	- 농촌주택개량사업	-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농)
	④ 농촌공간재생 / 농촌다움복원	- 농촌다움적자원 활용	- 경관보전식물
2. 농촌 경제 활력 제고	① 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 6차 산업 활성화	- 생활리플러스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농촌유류시설활용창업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지자체) - 특성화시장육성사업(중기부) - 청년창업 육성(중기부)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중기부)
	②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지자체)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① 중간지원조직 육성	- 시·군 역량강화	-
	②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농업활성화 - 농촌공동체활성화사업 - 귀농귀촌 활성화	-
	③ 지역사회주도 생활서비스 공급망 구축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행안부)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행안부)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 생활권 설정 & 정책과제 설정

➡ 12개 시군별(농촌협약 시범지구)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사례

구 분	경기 이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영월군
행정구역	인구 221,585명 / 2읍, 8면, 4동	인구 354,376명 / 1읍, 8면, 16동	인구 39,127명 / 2읍, 7면
생활권 설정	4개 생활권 • 북부생활권 : 1면 1면 • 동부생활권 : 1읍 1면 • 서부생활권 : 1면 2면 • 남부생활권 : 1읍 2면	3개 생활권 • 성장생활권 : 2읍면 1면 • 벽운생활권 : 1면 1면 • 개발생활권 : 동지역 의존 4면	3개 생활권 • 중부생활권 : 1읍 2면 • 서부생활권 : 1면 2면 • 동부생활권 : 1면 2읍면
비 전	구석구석 누리는 행복복지, 활력과 복합의 농촌공간	건강하고 행복한 푸른 농촌, 원주	365일 살기 좋은 일상을 책임지는 평생생활권 영월
정책과제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활력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활력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통합적·체계적 농촌지역 개발 4. 수요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2. 농촌환경의 보존 및 활용 5. 특화발전 성장동력 확보 3. 체감·맞춤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6. 인적자원 발굴 및 조직화
농촌생활권 구분·범위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 생활권 설정 & 정책과제 설정

➡ 12개 시군별(농촌협약 시범지구)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사례

구 분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홍성군
행정구역	인구 39,163명 / 1읍, 10면	인구 48,672명 / 1읍, 10면	인구 100,423명 / 3읍, 6면
생활권 설정	4개 생활권 • 괴산생활권 : 1읍 4면 • 청천생활권 : 1면 2면 • 청안생활권 : 1면 2면	2개 생활권 • 중서생활권 : 1읍 6면 • 동부생활권 : 4면	3개 생활권 • 홍성생활권 : 2읍 3면 • 광천생활권 : 1읍 2면 • 갈산생활권 : 3면
비 전	2040 괴산군 도농복합 위라벨 행복공동체	꿈과 희망이 있는 마음의 고향, 여유로운 영동	국세척도(克世拓道)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홍성군
정책과제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 활력 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 활력 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성 제고 2. 안정적 정주체계 확립 및 농촌공간의 재편 3. 농촌경제 활성화 및 다각화 4. 새로운 농촌커뮤니티의 육성
농촌생활권 구분·범위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 생활권 설정 & 정책과제 설정

➡ 12개 시군별(농촌협약 시범지구)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사례

구 분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행정구역	인구 48,755명 / 1읍, 17면, 6동	인구 222,224명 / 1읍, 6면, 12동	인구 109,371명 / 2읍, 9면, 15동
생활권 설정	3개 생활권 • 함창·낙동생활권 : 1읍 7면 • 공성생활권 : 1면 2면 • 화서생활권 : 1면 6면	3개 생활권 • 서부생활권 : 1읍 2면 • 중부생활권 : 동지역의존 3면 • 중부생활권 : 동지역의존 + 동지역 면적 1면	3개 생활권 • 서부생활권 : 2면 1면 • 남서부생활권 : 1읍 2면 • 독립생활권 : 1읍 4면
비 전	365 어울누리 상주	농촌과 도시의 행복한 동행	365일 행복한 영남의 중심지, 밀양
정책과제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 활력 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 활성화 3. 도농 네트워크 강화	1. 농촌공간 정주여건 개선 2. 수오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농촌경제 활성화 4. 철고실은 문화·관광기반 형성 5. 지역주도형 거버넌스 활성화
농촌생활권 구분·범위			

03 농촌공간 계획체계와 주요내용

■ 생활권 설정 & 정책과제 설정

➡ 12개 시군별(농촌협약 시범지구) 농촌공간전략계획 수립사례

구분	전남 보성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행정구역	인구 43,295명 / 2읍, 10면	인구 27,871명 / 1읍, 10면	인구 28,902명 / 1읍, 11면
생활권 설정	2개 생활권 • 동부생활권 : 1읍 4면 • 서부생활권 : 1읍 6면	2개 생활권 • 순창읍생활권 : 1읍 6면 • 자립회복생활권 : 4면	1개 생활권 • 단일생활권 : 최상위 1읍, 중위 2읍, 하위 8면
비전	365 행복농촌 보성	생활서비스를 원로로 주민활동이 발효되는 365 권리미업 순창	하나되어, 일상의 행복을 채워주는 365 강소도시 임실
정책과제	1. 농촌생활여건개선 2. 사회복지·생활서비스 확충 3.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구축 4. 지역형토산업 육성 5. 농촌자원활용 관광산업 육성	1. 서비스 거점 구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 2. 농업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3. 정작환경 및 수요 맞춤형 돌봄 시스템 강화	1. 농촌정주여건개선 2. 농촌경제 활력 제고 3.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촌생활권
구분·범위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2. 임실군 농촌협약 계획수립

01 개요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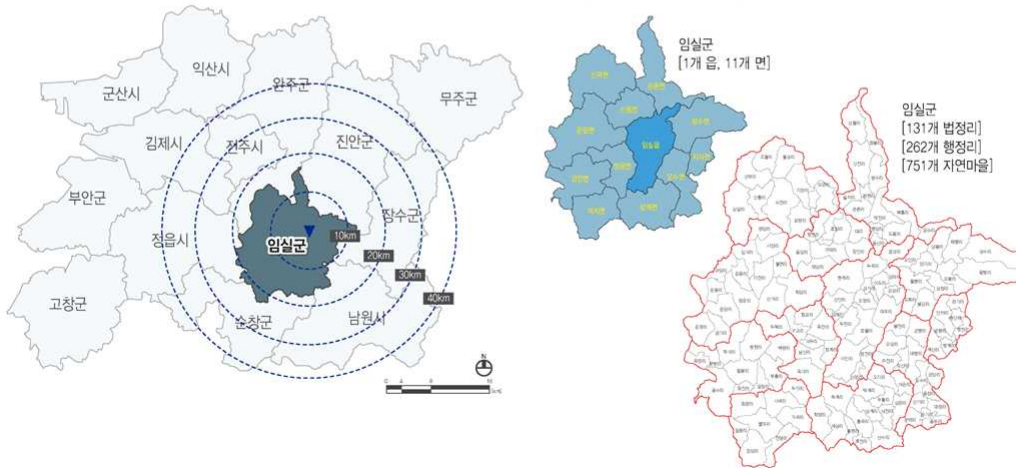
02 농촌공간 전략계획

0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01 개요 및 계획수립 과정

-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 (1개 읍, 11개 면)
- 인구 : 28,902명 (남 14,659 여 14,243) / 14,788세대
- 면적 : 597.37ha (법정리 131개소, 행정리 262개소)
(자연마을 751개소)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년도 : 2040년
- ※ 농촌공간 전략계획 : 2021년 ~ 2040년 (20년)
-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 2021년 ~ 2025년 (5년)
(임실읍 중심 단일생활권)



01 개요 및 계획수립 과정

■ 계획수립 과정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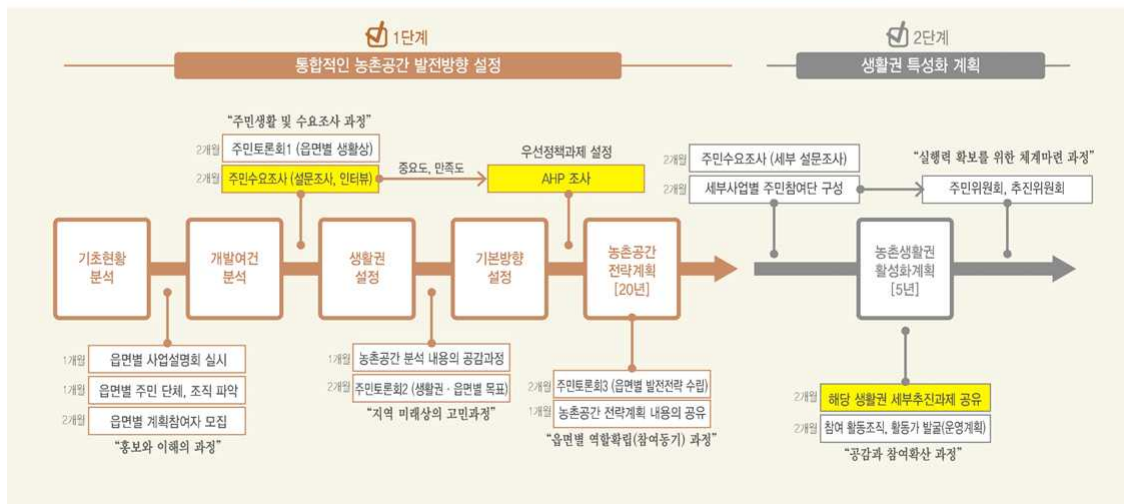
2020년 8월	2020년 9월~10월	2020년 11월~12월	2021년 1월~6월
(08.07) 과업착수 (08.10) 임실군 업무협의 (08.28) 농어촌공사 업무협의 (08.31) 공간분석(GIS)팀 업무협의	(09.)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실시 (10.07)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0.13)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0.) 읍면별 주민설명회 (10.16) 농식품부 모니터링_착수보고 (10.21)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0.30) 농식품부 모니터링_중간보고	(11.04)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1.09)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1.) 주민수요(설문)조사 (11.13)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1.27) 농식품부 모니터링_중간보고 (11.30) 농식품부 모니터링_중간보고 (12.02)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2.07)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12.14) 농식품부 모니터링_중간보고 (12.30)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1.18)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2.02) 농식품부 모니터링_전체회의 (02.10)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3.02)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2.19)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 (03.17)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3.24)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4.12)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4.26)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5.07)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5.21)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5.31)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6.14)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6.30)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07.05) 농식품부 모니터링_서면검토
사업개요, 추진체계, 추진계획, 향후일정,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읍면별 주민설명회,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 및 계획추진 방향	주민수요조사, 총괄계획 검토 및 자문	농촌공간 전략계획 총괄 검토 및 자문

01 개요 및 계획수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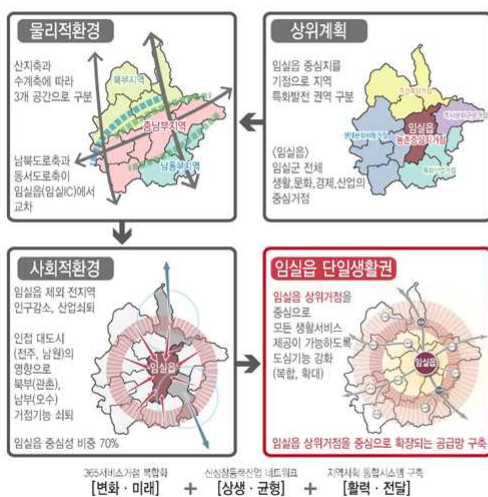
■ 계획수립 과정 (주민수요)

단계별 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 공유과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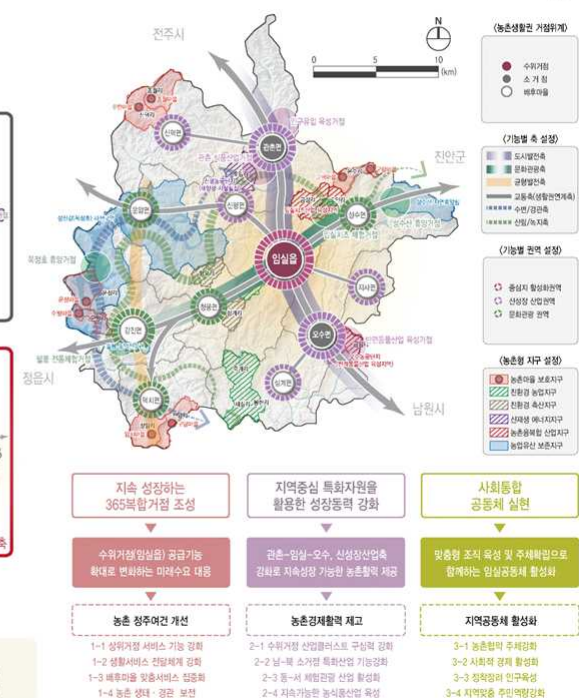
정책 목표의 이해, 실생활의 목소리, 계획 내용의 공감 ▶ 참여의 동기



02 농촌공간 전략계획



"활력의 농촌, 상생의 미래, 더불어사는 공동체"
 하나되어, 일상의 행복을 채워주는 3/6/5 강소도시 임실!



03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라이프 에듀케이션(Life-Education), 누구나 살고싶은 교육도시 임실!

“생애주기별 교육서비스”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에 대응
(생애교육 / 일자리 확대 / 쾌적한 정주 환경을 통한 인구유입 및 유지)



(통합) 서비스 고도화 ▶ 라이프 에듀케이션 플랫폼 구축	(강화) 인구 정착 · 특화산업 ▶ 이주정착, 일자리, 주거환경 강화	(보장) 안전 · 편리한 삶 ▶ 지역맞춤 기초서비스 개선
상위 거점 (임실읍)	중위 거점 (관촌면, 오수면)	하위 거점 (9개 면지역)
1. 교육통합 중심기능 고도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상) / 행복누리원 컨설팅사업(연계)	1. 인구정착 주거환경 마련 관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연계)	1. 기초보장 정주서비스 개선 기초생활거점사업(대상)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대상) 마을만들기사업(연계) / 농촌다움복원사업(연계) 등
2. 지속가능한 경제인력 육성 신활력플러스사업(연계) / 임실을 중심상권 활성화(연계)	2. 남북 특화산업 거점 일지리 육성 농촌유용시설활용 창업지원(연계) / 반려동물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연계)	2. 사회보장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연계)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연계) 등
3. 라이프 에듀케이션 플랫폼 시군역량강화사업(대상)	3. 거점특화 교육공동체 활성화 농촌백을 아카데미 운영(연계) / 차세대농업인력 양성(연계)	3. 지역맞춤 혁신그늘 양성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연계)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동가 지원(연계)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3. 임실군 농촌협약 민간협치 실현을 위한 과제

- 01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성 (임실군)
- 02 행정의 역할과 과제
-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 0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01 농촌협약 거버넌스 구성 (임실군)

■ 거버넌스 구축 기본방향

- 실행 및 지원기구, 의결기구, 협의·검토·자문기구 등 실행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위해 각 주체별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역할을 설정

역할	구분	내용
의결기구	농촌협약 위원회	- 농촌협약 과제 논의 및 의결 - 행정, 군의회, 전문가(기초계획지원단), 농촌협약지원센터, 주민대표 참여
		- 전문가 자문, 기관 간 협연모델 제시, 신규사업 발굴 등 협연체계 구성
	농촌협약 협의회	- 행정,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참여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 및 현안문제 논의·협의 - 행정, 기초계획지원단,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참여
협의기구	민간 협의회	- 지역사회현안에 대한 회의, 토론, 자문 및 사업발굴 - 읍면대표(행정, 주민), 전문가, 현장활동가 참여
	행정 협의회	- 농촌협약 수립,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 관련실과 11개협력부서 참여
	농촌협약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농촌협약 업무지원(역량강화, 지역 인재/전문가 육성, 모니터링 실시 등) - 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조직 보강
실행 및 지원기구	전담조직 (농촌협력과)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총괄기획, 시행 - 농촌협력과 5개팀 19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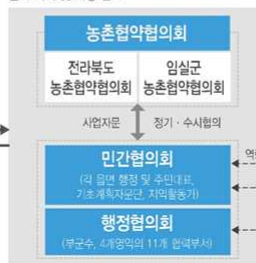
〈의결기구〉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사항 결정



〈협의기구〉

지역문제 진단, 해결방안 발굴, 협약 기획 및 이행 간의



〈실행·지원기구〉

지역주민 역량강화, 조직육성, 갈등관리 지원 추진기반 마련, 행정설치 수행, 타 부처 연계방안



02 행정의 역할과 과제 : 전담부서의 역할

임실군은 왜? 농촌협약을 해야하는가?

임실군 농촌협약의 방향성... 주체성... 주민을 위한 정책추진의 지속적 고민

➡ 방향성 (方向性)

- 농촌협약은 지자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선행
- 위탁업체와 용역사는 선행되었던 방향성을 고려하여 현황분석 및 과제도출 그리고 피드백을 진행
- 농촌협약은 사업진행 관련팀간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



➡ 주체성 (主體性)

- 계획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구축
- 전담부서에서는 해당 지자체 농촌협약의 큰 방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직체계를 주체적으로 구축
-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위탁업체나 용역사가 할 수 없는 일



➡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 주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사실보다는 기능에 집중
- 사업선정과 예산집행에만 치중 X
- 시설조성 예산뿐만이 아니라 관리운영 예산 편성이 중요 (주민운영, 역량강화)



02 행정의 역할과 과제 : 타부서간의 협력

농촌 3/6/5 생활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칸막이 행정, 타 실과에서는 내일이 아닌 니 일!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 주민참여 동기·의식 마련 필요

임실군 농촌협약 추진과정의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

계획수립 > 심사 > 사업시행 :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시간)이 필요함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 입체적인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필요

데이터 중심, 전문가 중심의 분석 VS 지역주민의 실제 생활상 이야기

실문조사 중심(중요도, 만족도), 데이터 분석 중심의 농촌공간 계획 / 사업발굴

➡ 데이터 중심의 조사와 분석 / 주민수요 조사 및 공유과정 부족

상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농업농촌 발전계획 군정방향, 법정계획, 전략계획	생활환경적 현황	읍면별 서비스 현황 중심기능 접근성 도로망체계, 교통서비스
자연지리적 현황	행정체계(경계), 지형, 수계 광역 도심과의 연계구조 인접 시군과의 연계구조	지역자원 및 잠재력	특산물, 문화재, 지역공동체 사업연계 방향 참여가능조직 발굴
인문사회적 현황	인구현황, 정래인구 추정 고령화비율, 과소인구 지역 읍면별 주요 연형계층	공간구조 분석	읍면별 계층구조 인근 대도시 광역이동패턴 지역 내 통행패턴
산업경제적 현황	산업구조, 농가, 생산, 농지 시장, 상권, 관광인프라 지역 특화산업	수요조사 및 자문	주민설문조사, 서비스이용 기추진 사업 (거점, 마을) 농촌협약 위원회 및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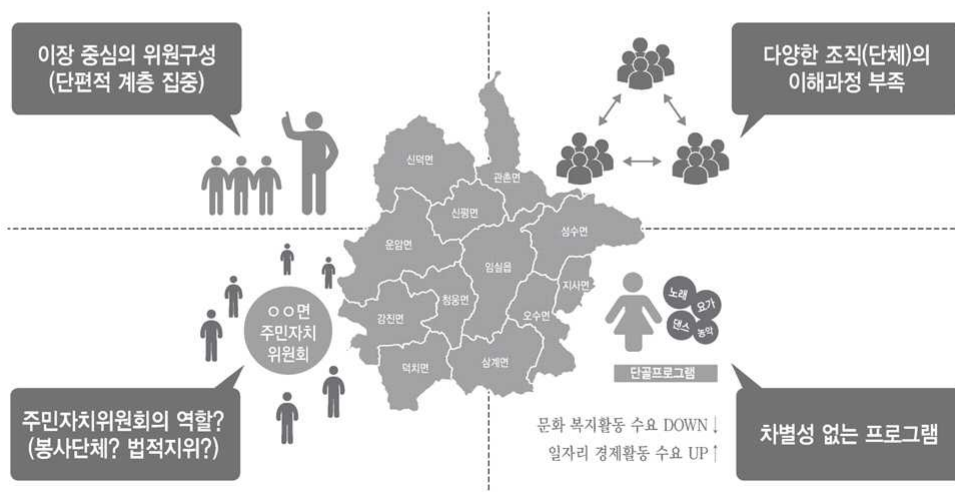
왜? 우리는 농촌협약이 필요할까?
우리면의 역할은 무엇일까?우리지역의 주요활동 계층은?
내 나이 85살... 20년 뒤?주민위원회는 이장들이 하는거야?
위원회? 협의회? 추진단? 활동가?

- 1step. 농촌협약의 주민 이해 과정 (충분한 설명과 홍보)
2step. 지향목표에 대한 공감대 과정 (주민계획참여 필요)
3step. 단계별 주민참여(위원회, 협의회, 추진단, 활동가)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 읍·면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실행 필요

읍·면별 여건 및 성장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조직 구성 필요

읍·면별 주요 활동조직이 상이함 (노인, 청년, 학부모, 영농단체, 봉사단체)



03 주민(민간)의 역할과 과제 (거창군 농촌협약 추진사례)

거창군 주민자치회

- 구성근거 :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1개 면지역(거창읍 제외)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거창군 (전국적 선도지역)
-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주민 참여예산사업 공모



제도적 뒷받침 + 선도화된 주민자치 역량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법적 기구 X) ⇒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 역할, 예산 보장)

읍면별 주민토론회

- 거창군 농촌협약 사업목적의 공유
- 지역의 일상적 생활상 조사 (주민살의 이야기 청취)
- 거창군 전체의 발전상과 해당면의 역할 정립
- 인접 면 지역과의 역할(기능) 연계 방안 발굴
- 읍면별 주요활동 조직 및 희망단체 발굴



12개 읍·면, 500명 주민과 함께 계획 수립 ▷ 정량적 지표와 주민 실생활상 검토 ▷ 동기마련 ▷ 계획실행 참여

0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3/6/5 생활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중간지원조직...

과거 마을만들기 중심에서 현재 기초단위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과 역할의 확대 필요

01 중간지원조직 지위(위상·권한)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주체는
(사)마을가꾸기협의회(13개 회원마을)

(사)마을가꾸기협의회 : 13개 회원마을로 구성된 일의단체
운영/재원마련 : 지자체 수탁(업무대행) /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마련

임실군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대표성(위상과 권한) 강화 필요

02 재원 및 전문성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능 및 역할 대비 인력부족

임실군 인구 : 28,902명(1읍, 11면)
(사)마을가꾸기협의회 : 6명(사무국장, 총무팀 2, 공동체팀 3, 일자리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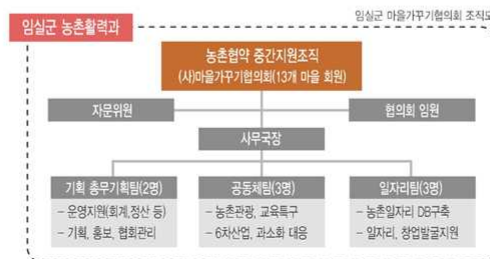
다양한 활동을 융합·지원하는
실행조직으로서 재정력+전문성 강화 필요

03 네트워크 구축

부처별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 부족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 도시재생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생활력플러스,
마을가꾸기협의회,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인재, 정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04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현재 임실군은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고민중

3/6/5 생활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필요

1안 중간지원조직 통합하여 1개의 농촌협약만을 담당하는 경우



2안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여러 개의 팀으로 구성, 그 중 하나의 팀이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경우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체계와 발전방향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문

1.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정석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3. 한상엽 [임실군 농촌활력과 팀장]
4. 황성수 [임실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농촌협약 추진체계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주인

□ 현행 농촌협약의 성격

- 현재 농촌협약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20년 계획 기간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지만, 사실상 5년 기간의 중단기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수단 성격을 지님.
 -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시·군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생활권 단위 사업 아이템 발굴이 농촌협약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생활권별로 동일 사업비를 일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한정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컨설팅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상향식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획 과정 하에서 행정과 전문업체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다수 지자체에서 중간지원조직 등의 계획 과정 참여는 제한적임.
 - 많은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은 본격적인 계획 실행 단계부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5년 기간의 협약 종료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이 없음.

□ 앞으로 예상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

- 앞으로 농촌협약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제도 하에서 시·군 단위 농촌공간기본계획(20년)과 농촌공간관리(정비)계획(5년)을 수립하게 되며, 농촌공간관리계획이 향후 농촌협약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제도 정착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현행 계획과 비교해서 다음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농촌협약과 연계한 지원 대상 사업 영역 확대
- 중장기적인 공간 관리 및 토지이용계획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
- 주민협정에 기반을 둔 마을만들기, 농촌 자원 보전을 위한 상향식 주민 활동 육성에 대한 강조
- 특정 생활권만이 아니라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활동 지원

□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축 방향

○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농촌협약 추진을 위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다움 유지·보전을 위한 상시적인 주민 활동을 육성하는 추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자체 조례를 활용,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협정 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토지이용관리가 확산되는 것이 농촌공간계획이 제도로 자리잡는 데 필수적인 조건임.

○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위상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전문 컨설팅기관 중심의 계획 과정이 아니라 지역에서 각급 주민 공동체 발전 방향에 대한 상시적인 논의 및 계획 과정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상향식 계획 수립, 주민협정 체결 확산 등 지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
- 행정리나 자연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공동체 활동 육성을 통해 농촌협약 과정에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발전 방향

- 위와 같은 지향점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협약 추진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협약 대상으로 설정된 생활권을 대상으로 소속 읍·면들 각각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을 벗어날 필요
- ⇒ 충실한 계획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이 있는 곳들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시·군별 협약 내용에 따라 상이한 사업비를 지원
- 농촌공간계획 확산을 위해 읍·면 등 커뮤니티 단위의 상향식 계획 수립 과정을 유도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
 - 2000년 영국 DEFRA에서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의 제안에 입각하여 잉글랜드 전역의 농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패리쉬계획(Parish Plan) 수립 사례 참고
 - * 2004년까지 1,000개 커뮤니티가 패리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 5,000파운드까지 자문 비용과 보조금을 지원

농식품부 지역개발정책 개선지원단(TF) 농촌협약 분과회의 활동 소감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정석호

1. 농식품부 지역개발정책 개선지원단 농촌협약 분과회의 개요

- 목적: 농식품부 지역개발정책 개선지원단 농촌협약 분과회의는 지자체,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발굴, 논의 과정을 거쳐 지역개발사업 개선·재편(안) 마련을 위해 진행됨
- 회의 진행 일정: 7.29(목)~10.22(금) 총 5회(키오프회의, 1~4회 분과회의)

2. 농촌협약 분과회의 참여 이유 및 활동

■ 농촌협약 분과회의 참여 이유

-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농촌활성화를 위한 고유 역할보다는 사업 추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변화 유도
- 농촌협약 사업의 도입 취지(지역 자체 발전방향 수립,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방식 전환)와 맞지 않는 ‘패키지 사업’ 위주 사업 진행으로 지역특성 반영이 어려운 점 해결
- 광역 자치단체와 중간지원조직 역할 정립을 통한 실질적 기능 강화 요청

■ 농촌협약 분과회의 참여 활동

- 지역개발정책 제도개선 방향 의견 제시(첨부 1. 참고)
 - 시군의 자율사업 도입(사업비 2~30%이내 자체사업 진행)을 통해 농촌관련 시군의 상황에 맞게 사업추진 유도 방안 제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복성 문제 해결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중간단위 거점 조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 제시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강화를 통한 광계단, 농촌재생교육 총괄 등 중간관리 기능 부여 필요
 - 광역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부분을 담당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정책개발 업무 부여 필요
-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안 개선(안)제시(첨부 2. 참고)
 - ① 충남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추진과 행정지원체계 정비, ②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설치·운영방향, ③ 농촌정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개선(안) 제시

- 농촌정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개선(안): 농촌협약 관련 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체화 및 인력 지원방안 마련(국비포함 인건비 사용 명시화), 광역의 역할강화(행정의 중간관리 기능 부여,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유도를 통한 지속성 강화)

3. 농촌협약 분과회의 활동 소감: 희망과 우려의 연속, 기대감

- 농촌협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발제 및 토론 등을 통해 가이드 라인의 전제조건을 많이 개선 한 점은 다행
- 시군에서 농촌협약 추진시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과에서 논의)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생각함(시도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식차이,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

첨부 1. 지역개발정책 개선지원단(TF) 분과회의를 위한 논의 과제 제출(1차회의)

■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제점

○ 생활권 설정의 타당성 문제 발생

- 농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중복성 여부: 최상위 계획인 농발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중복 해결 필요. 농발계획안에 농촌공간계획 포함 가능 여부등 검토 필요
- 공간계획 및 생활권 설정을 위한 일괄적인 구분, 실태분석 위주로 현실 반영 여부 미비
- 분석방법론의 실효성: 읍면으로만 구별해서 가능한 것인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 다른 경우 해결 방안 불투명, 통계분석보다 빅데이터 분석 타당

○ ‘패키지 사업’ 사업으로 인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어려움

- 농촌협약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농식품부의 ‘패키지 사업’ 위주로 가면 서 농촌현장 및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보다 공모를 위한 사업 진행
- 농식품부 기존 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시군은 2단계만 가능하게 되어 사업별 중복투자 유도 결과 발생

■ 제도개선 방향 의견 제시

○ 시군의 자율사업 도입

- 계획 수립 주도권의 지자체 이양이라는 목적에 맞게 농식품부 사업외에 시군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시군 자율사업 도입
- 국비사업의 2~30%이내 자체사업 진행 가능하게 하여 농촌관련 시군의 상황에 맞게 사업추진 유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복성 문제 해결 및 신규사업 확대

-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경우 읍면소재지가 아니지만 중심성과 기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및 배후마을 지원을 위한 중간단위 거점 조성
- 사후관리 방향으로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과 연계하여 ‘패키지 사업’ 추가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강화

-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도비가 포함되기도하며, 농촌협약 심사 및 컨설팅하는 정도가 아닌 광계단, 농촌재생교육 총괄 등 중간관리 기능 부여 필요
- 광역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부분을 담당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정책개발 업무 부여(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통합 유도)

첨부 2.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안 개선(안) (2차회의 발제)

1. 충남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추진과 행정지원체계 정비(생략)

2.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설치·운영방향(생략)

3. 농촌정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개선(안)

※ 농촌정책전문가 및 충남·전북 등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내용임

■ 농촌협약 관련 위원회의 역할 구체화

○ 현재

-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조건의 모호성
 - 농촌협약위원회는 시군 농촌정책을 정하는 성격으로 규정되나 생활권활성화계획 대상의 지역주민 대표 및 지역공동체 참여로만 되어 있음
 - 일부시군은 지역주민 대표 및 지역공동체를 포함시켜 생활권을 정한 경우도 있음
- 광역단체의 참여 및 역할에 대한 구체화 필요

※농촌협약 위원회: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이행에 직접 참여하는 협약 당사자(시·군 및 시·도, 지역주민 대표, 지역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 중심 의사결정기구

※농촌협약협의회: 민관협치형 농촌정책추진체계 마련 구축·운영협의체(순수 협의체)

※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농촌정책, 정책과제 등 관련 자격·경험 전문가로 구성

- 자료출처: 농식품부, '21년 농촌협약 준비 시군 대상 설명회 회의자료, 210416

○ 지침 변경 제안: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협의회, 사업별 추진위원회 간 관계 설정

- 농촌협약위원회 구성시 광역단체의 참여여부 명시화 필요
-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주민여론 수렴(원탁토론회 방식) 의무화
- 농촌정책 추진관련 조례 제·개정 의무화를 통한 역할 제시
 - 마을만들기(공동체)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농촌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와 농촌협약 위원회의 관계와 역할 제시 의무화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체화 및 인력 지원방안 마련

○ 현재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역할 없음
 - 농촌협약을 준비한 시군의견(충남포함 의견수렴):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의무만 있고, 중간지원조직을 전제조건 수단으로 생각, 민간거버넌스 주체가 아닌 사업 시행기관으로 인지
- 중간지원조직의 농촌협약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운영 지원방안이 없음
 - 기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은 최소인원으로 고유업무 및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전담하고 있음
 -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는 시군 자체부담으로만 되어있어 시군행정의 부담이 커짐

-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역할분담 불분명
- 기존 중간지원조직 설치한 시군의 경우 농촌협약지원센터 변경 유무에 대한 제시 필요

○ 지침 변경 제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 방안 구체화

- 농촌협약지원센터 지정 개념 도입
 -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업무외에 농촌협약을 지원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센터 난립에 따른 주민 혼동 방지 및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 유지 유도
-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위상
 - 농촌정책의 실행 주체로 역할 부여 및 농촌활동가 육성을 통한 농촌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
 - 기존 마을만들기(공동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기존 농촌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와 농촌협약 위원회의 관계와 역할 제시 의무화
- 농촌협약 지속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제시
 -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의무화 명시
 -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가이드라인에 농촌협약관련 업무 포함
- 예산 및 인력 지원방안 마련
 -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향을 농촌정책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시화하여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국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또는 농촌협약 전제조건에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이 국비포함 인건비(활동비) 사용 명시화

■ 광역의 역할강화

○ 기존 광역의 역할에서 중간관리 기능 부여

- 농촌협약에 포함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도비가 포함되기도하며, 농촌협약 심사 및 컨설팅하는 정도가 아닌 광계단, 농촌재생교육 총괄 등 중간관리 기능 부여 필요

○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시군 농촌협약 총괄 역할 부여

-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의무화와 중간관리 역할 부여
 - 광역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역량강화부분을 담당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정책개발 업무 부여
 - 농촌협약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사후관리 기능 부여: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부진지구 대책 마련 등
-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농촌활성화센터의 통합 유도
 - 광역 중간지원조직과 농촌활성화센터 동시 존재하는 시도: 통합을 유도를 통해 농촌관련 정책 총괄하는 역할 부여
 - 농촌활성화센터만 존재하는 시도: 기존 농촌활성화센터의 개편을 통해 광역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농촌협약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자료

임실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한상엽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1) 거버넌스 실행주체 구성

○ 기본방향

- 임실군 농촌협약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분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추진 주체의 구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전문가를 연결하여 주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고 주민참여와 주민협약을 지원하여 각 참여 주체 간 상호 호혜적인 활성화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2) 거버넌스 구성

- 실행 및 지원기구(전담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 의결기구(임실군 농촌협약위원회), 협의·검토·자문기구(농촌협약협의회) 등 실행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위해 각 주체별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역할을 설정

<농촌협약 활성화 계획 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	구분	구성	역할
의결 기구	농촌협약위원회	임실군, 이장협의회, 기초계획지원단(전문자문단), 군의회, 농촌협약지원센터,	·농촌협약 대표 의결기구 ·활성화계획의 사업 목표·추진전략, 추진과정·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협의 기구	전라북도 농촌협약지원단	전라북도, 농어촌공사, 전북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촌건축학회, 전문가	·정기 상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촌협약 기획, 이행과 관련된 주요 이슈 논의, 정보공유,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임실군 농촌협약 협의회	임실군, 기초계획지원단, 농촌협약지원센터, 농어촌공사(지사)	·군내 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협약 시행과제의 실효성 확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기능 통합
	행정협의회	임실군 관련 실과 팀장 및 담당자	·임실군 내 다양한 농촌지역 사업 관련부서가 원활한 협업을 위해 상시 의사결정 자문 및 행정 협의기구 역할 수행 ·분야별 실무부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민간협의회	기초계획지원단, 생활권 읍면 주민대표, 읍면장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내 현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읍면 주민대표(이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 읍면 행정대표와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의 모니터링 지원
실행 지원 기구	농촌협약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조직확대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촌협약위원회에 제시, 단체 및 부서간 의견조율, 민간조직 역량강화(운영·관리 지원프로그램 등)진행
	전담조직	임실군 농촌활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서 사업추진 기반마련, 행정절차 수행, 주체 및 조직 지원, 시설물 관리·감독 및 운영·관리지원

<농촌협약 활성화계획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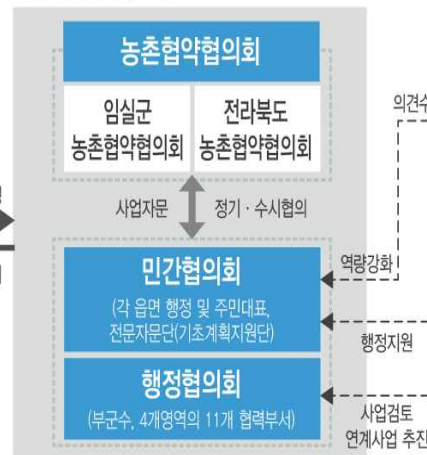
<의결기구>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사항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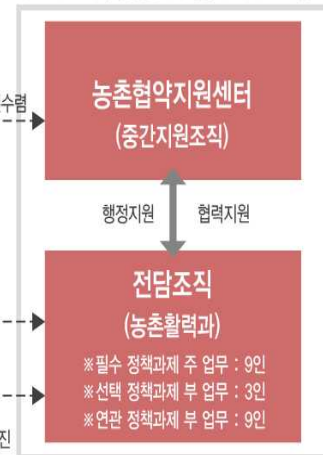
<협의기구>

지역문제 진단, 해결방안 발굴
협약 기획 및 이행 건의



<실행·지원기구>

지역주민 역량강화, 조직육성, 갈등관리 지원
추진기반 마련, 행정절차 수행, 타 부처 연계방안



○ 농촌협약위원회(의결기구)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에 직접 참여하는 협약의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 역할 : 활성화계획을 기획·이행·완료하기까지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

<농촌협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내 용
명 칭	· 임실군 농촌협약위원회
근 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추진계획’
구 성	· 12명으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및 위촉위원) - 위원장 : 임실군 부군수 - 부위원장 : 전북대학교 교수 - 위원 : 의회 및 행정(5), 전문가(3), 중간지원조직(1), 주민대표(1)
위촉 요건	· 임실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대표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자문사항	·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일반농산어촌사업 검토
소 집	· 분기별 1회를 원칙, 위원장 필요시 소집
간사 및 서기	· 간사(농촌개발팀장), 서기(농촌협약담당자)

○ 농촌협약 협의회

① 전라북도 협의회

- 전문가 자문, 기관 간 협업모델 제시, 신규사업 발굴 등 농촌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업체계 구성
- 기관 간 협업모델 마련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자료공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시·군별 최상의 활성화계획 도출
 -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연구 및 자문, 생활권 분석 등
 - (한국농어촌공사) 포럼 운영, 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참여,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위·수탁 추진
 - (전북연구원) 농식품부에 의견 제시, 타 부처 사업과 연계방안 제안
 -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활용 및 연계 방안 마련
 - (한국농촌건축학회)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 연구 등

② 임실군 협의회

- 임실군 농촌협약협의회는 민간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지역현안문제와 행정협의회의 부서별 사업진행 내용 및 상황에 대해 행정, 전문가,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이 모여 함께 논의·협의하고, 도출된 기획내용을 농촌협약 위원회에 상정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 및 현안문제에 대해 1차적 필터링을 통해 활성화계획의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각 성과별 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 도움

③ 행정협의회

- 농촌생활권내 임실군 행정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지원
- 행정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체결후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부서간 협업을 추진

④ 민간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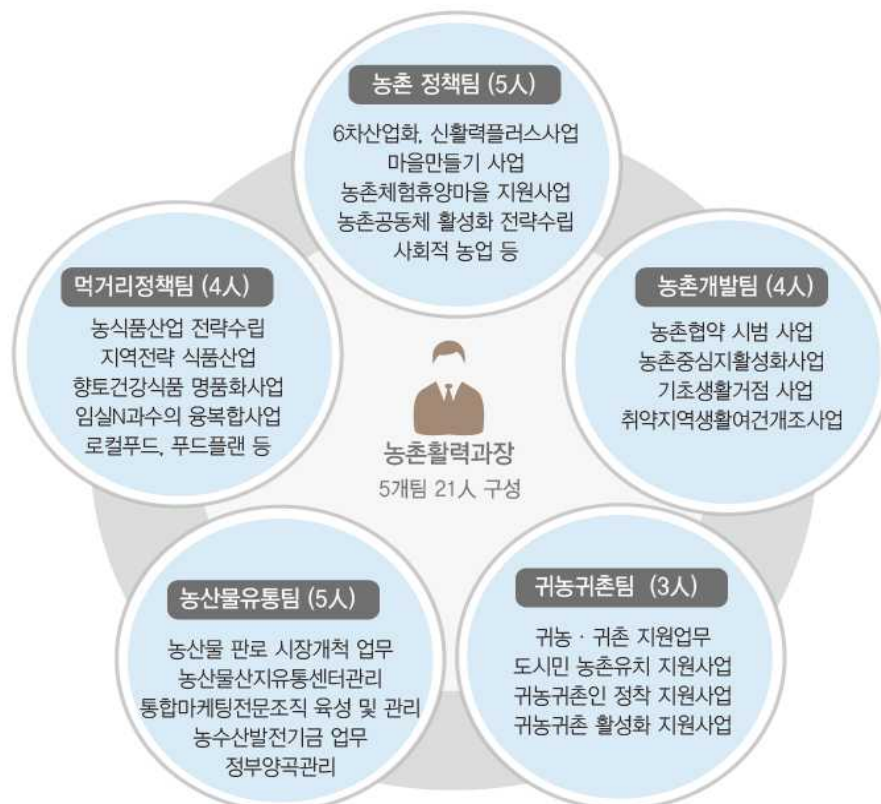
- 민간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발굴하며, 논의된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농촌협약에 반영하도록 건의
- 12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읍면장과 주민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민간협의회를 구성

⑤ 전담부서 조직 및 인력현황

- 농촌활력과는 농촌정책, 농촌개발, 귀농귀촌,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시 원활한 의견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
- 또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행정 절차 수행과 함께 타 부처 연계방안 등을 행정협의회와 논의하며 사업실행력을 담보로 담당자별 명확한 업무분장, 관련분야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

<전담부서 구성 및 조직도>

조직명	구성일자	인원	조례여부
농촌활력과	2018.10.19.	21명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8년 8월 31일 제정)



⑥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임실군 농촌협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1. 센터 자체 역량강화	5. 새로운 지역공동체 사업 모델을 발굴 및 사례 구축
2. 공동체사업 및 주체의 발굴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6. 지역 공동체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회나 장소,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반 구축	7. 정책 제안 및 제도 마련
4. 지역의 각종 향토자원 발굴 및 사업으로의 연계	8. 그 밖에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출처 :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2012.12.20.)

□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1) 성과관리 모니터링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주체는 농촌협약사업 유형의 특성, 사업의 목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활성화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세부사업별 성격>

정 책	내 용
농촌정주여건 개선	-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으로 기능보완(중·고차 서비스 인프라 확충) - 거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서비스 공급망 재편(접근성 개선 및 거점연계 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촌 정주환경 조성
농촌경제활력 제고	-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거점 강화 - 대도시 연계한 남-북특화산업육성(관촌면 식품산업, 오수면 반려동물 산업) -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축산 환경 등 경쟁력 있는 농업 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통합거버넌스 운영 - 서비스 맞춤형 활동조직 육성 - 미래인력(귀농인·청년) 정착기반 마련 - 지역활동가(액션그룹) 양성으로 주민자치 운영능력 배양

2) 평가 및 피드백 계획

-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종합평가를 농촌협약위원회에서 실시
-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홍보하고,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양·개선하여 사업의 내용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점진적으로
- 사업 우수 사례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담당 공무원·전문가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사업 참여 의지를 고취함. 또한 사업이 부진한 지역은 기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토 론 문

임실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 황성수

■ 배경 및 취지

- 농촌협약의 민·관협의기구인‘농촌협약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농촌협약의 마중물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추진단 사무국장으로 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 앞의 두 분 발제자의 발표내용과 농특위에서 선정한‘4대 의제-7대 세부과제-14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전담부서 신설과 행정협의회 운영

- 농촌협약의 담당부서이자, 전담부서로‘농촌활력과’(18년 신설, 5개팀 22명 구성)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의 다양한 영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행정협의회는 부군수를 단장(부단장:산업건설국장)으로 4개 대표부서(농촌활력과 포함 4개 과)와 11개 협력부서(팀)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협의회의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부서의 참여가 필요함
- 다른 사업의 운영사례를 볼 때, 행정협의회의 운영은 정례적인 운영이 어렵고, 전체 회의 보다는 대부분 개별부서 간 협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례에 근거한 행정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주장하는 발제자의 제안에 공감함

(2) 공무원의 정책전문성 강화

- 현재 농촌협약 업무를 공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음. 담당 공무원은 농촌협약 이외 다른 사업까지 맡고 있고 순환보직제에 따른 인사이동이 될 수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됨
- 따라서 전문직위제 또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 확대 필요에 동의함

■ 중간지원조직 재편으로 민관협치 강화

(1) 농촌정책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는 현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조직을 확대해 구성할 계획임
- 그러나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는 조례('농업농촌 활력화 육성·지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의 개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마을만들기 이해당사자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음
- 임실군은 민간차원에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임실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계획(로드맵)
- 그동안 축적된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경험에 의해,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추진위원회에 마을가꾸기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니어클럽, 자활센터, 로템하우스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위 추진위원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로 모인 '당사자협의체'적 성격이면서, 향후 공동 네트워크 법인화의 단초가 됨
-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도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 네트워크 법인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 법인화 이후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마을만들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으로부터 수탁·운영할 계획이고,
- 향후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확장된 통합형 농촌정책(농촌협약) 지원센터 역할)

(2)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분담 및 연계협력

- 2020년 농촌협약 대응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끼리 농촌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관별 역할을 정해 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음(전라북도 농촌협약 협의회)
- 특히, 전라북도는 2009년 마을만들기 광역 중간지원조직을 2017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해왔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됨
 - 최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농촌협약 선정 시·군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촌협약 공동역량강화를 시행 중에 있음('21. 9월~11월)

- 최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로, 정책 발굴 및 현장지원체계를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과, 각종 사업 매뉴얼 개발, 교육방법론 개선, 교류사업 확장 등이 제시된 바 있음
- * '21.10.21. 전라북도 농정 거버넌스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농촌활력분과) 주최

■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당사자협의체와 네트워크 법인 활성화

-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협의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법인 설립→ 관련 조례 제정(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등)→통합 중간지원조직 및 시설 운영 수탁→ 귀농귀촌, 농촌협약,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등 점진적 통합영역 확대
- *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사)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 임실지역자활센터, 임실시니어클럽, 임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댐하우스 등

■ 농촌정책 추진체계 제도화

▶ 민관협치의 제도적 장치, 농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

- 기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지원근거가 된「임실군 농업농촌 활성화 육성지원 조례 (2012.12제정)」는 현재의 농촌정책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
- 따라서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등 민관협치형 추진 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농촌정책의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기타 제언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주민생활권 단위의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중요
 - 현황
 -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등 임실군 차원의 대응 미흡
 - 주민의 자치역량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자발적 참여 저조
 - 과제
 - 주민자치 분야 전담 전문직위 또는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 주민자치 분야 중간지원조직 설치 필요성에 따른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의 확대
 -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속적 추진

-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현황
 - 행정으로부터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한계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이직률과 낮은 자존감→활동가로서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의지 부족의 악순환
 - 행정 칸막이로 인한 지역내 개별 중간지원조직간 정보교류 및 소통 부족
 - 과제
 - 우선적으로 개별 중간지원조직의 공간 통합 실현 필요
 - 개별 중간지원조직 활동가간 일상적 정보교류 및 협업 점진적 확대
 - 행정사무 보조사업 대행 →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전라북도 차원의 기초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실행*
 - * '21.10.21. 전라북도 농정 거버넌스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농촌활력분과) 주최 토론회 내용 중 인용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민관협치형 추진체계의 원활한 진행과 확산을 위해
4차례 현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지역	정책사업	주 발제자(소속)
10. 01(금)	충남 청양	신활력플러스	구자인 소장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10. 21(목)	강원 평창	농어업회의소	김대현 사무국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11. 17(수)	전북 임실	농촌협약	김정연 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오테이 대표 (로컬마스터)
11. 18(목)	전남 목포	어촌뉴딜300	황길식 대표 (명소,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

* 세부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Live(오르빌, 농특위 채널) 영상을 통해 외부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관 (주)오르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